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2026. 11. 05 (목) 즉시 배포 가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문의 : 02)2630-0036~37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 개최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

- 오세훈 항소심 재판부, 1심이 인정한 자명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에도 무죄 선고
- 민주당 법률위, 오세훈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법리 해석, 쟁점의 사실관계와 증거능력 분석을 통해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는 11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 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총 10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5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랫동안 이 사건을 추적해 온 법률가와 언론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항소심 판결의 판단 근거와 법리 해석, 증거능력의 타당성을 낱낱이 분석했다. 나아가 판결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기조 발제는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 대표)가, 토론 발제는 박주민 국회의원(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은폐 진상조사단장), 이주하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엘피), 한상진 기자(뉴스타파)가 나섰고,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박종한(법무법인 청출 대표), 서태용(법률사무소 상상), 오도환(법률사무소 강물), 오동현(법무법인 린), 이동주(서리풀 종합법률사무소), 이승훈(법무법인 금성 북부분사무소), 전병덕(법무법인 강남), 전수미((사)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최신영(법무법인 LKB평산), 최정민(법률사무소 정세), 한지형(법무법인 평호) 변호사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어어 갔고, 전체 사회는 조기연 변호사가 맡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돈이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쪽문’ 같은 판결”이라며 “증거력을 축소하거나 증거 채택 배제를 통해 정치자금법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원이 오염됐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이상하고, 조희대 대법원도 수상하고 이상하다.”며 깊은 불신을 토로했다.

한편, 좌담회의 좌장인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판사가 독단적으로 추정에 의해서 경험칙과 논리칙을 벗어난 판결을 했다”며 “상고심에서 형사소송법과 확립된 판례 법리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진술자가 믿기 어렵다는 것과 진술이 말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마저 판결문 안에서 어긋난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명태균 진술과 무관하게 남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어떤 후보도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지 않을 것”이고, “법을 지킨 후보는 손해를 보고, 법을 피해 간 후보는 안전해진다. 이것을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도 비공표 여론조사의 등록 등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에 나선 한상진 기자(뉴스타파)는 오랫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취재해 온 소회를 밝히며 “최근 사법부가 벌이는 난동에 가까운 판결은 개별 판사들의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되고,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항소심이 채택한 증거법리와 대법원의 판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토론에 나선 이주하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엘피)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법률적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다.”며 “2심 판결은 증거 능력 뿐만 아니라 구성 요건부터 시작해서 형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모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총아’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

<행사 사진 1>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

<행사 사진 2>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

<행사 사진 3>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

<행사 사진 4>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의도적 쟁점 축소와 자료 배척, 뒤바뀐 증거 평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